"나 떨고 있니"…유흥업소 방문자들 좌불안석

광주 상무지구발 코로나19 비상

확진자 상당수 노래방 도우미 불특정 다수와 접촉 가능성 308명 자가격리 조치 속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고심

"저 아니고 제 친구 얘긴데요. 거기 노래 홀 유흥주점 갔다는데, 진단검사 어떻게 받아야 할 지 몰라서요. 그런데 선별진료 소 가면 신분 노출 안되나요?"

"도대체 (남자들은) 왜 그런 밀폐된 술 집에 간 거야? 사람 많이 몰리는 식당도 외식하러 안가고 '돌밥' (돌아서면 밥)하 느라 죽겠는데, 웬일이니 진짜."

광주지역에 '유흥주점'발(發) 코로나 19 주의보가 발령됐다. 유흥주점을 돌아 다니는 이른바 '도우미' 들과 동선이 겹친 손님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 더기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도우미'가 다녀 간 유흥업소와 동선 내 교집합을 갖는 손 님들 사이에서는 확진 여부 뿐 아니라 자 첫 자가 격리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는 것 만으로도 억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당국도 이같은 점을 파악하고 사생활 침해와 개인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떨고 있니"=17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역 최대 유흥가인 상 무지구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이날 오후 6시 현재 17명으로, 이들 확진자들이 거쳐 간 유흥주점만 무려 20곳에 이른다.

특히 확진자 중 상당수는 업소를 돌아 다니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것으로 알 려지면서 감염 확산에 초비상이 걸린 상

광주시는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 지난 6일 이후 15일까지 이들 유흥주점과 동선 관련성이 있는 대상자를 993명으로 꼽았다. 유흥주점 종사자, 여성접객원, 손님, 운전기사 등을 모두 망라한 숫자다. 물론, 정확하진 않다. 유흥주점이라는 특성상 출입자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들 중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볼수 있는 308명을 자가격리자로 분류,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 '도우미'로 불리는 여성접객원 확진자들이 불특정 다수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고 마스크 착용 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점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다. 확진자가더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방역당국 조사결과, 이들 확진자들은 피시방과 식당 등을 오가면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생활했다. 이들과 언제, 어디서든 접촉했다면 감염 우려가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만큼 감염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 "익명성 보장하겠다, 검사받아라" = 유흥주점 관련 코로나 진단 검사 대상자들이 받는 심리적 부담감은 엄청나다.



광주지역 유흥업소발 '코로나19'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전 광주 서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확진자들과 이동 경로가 겹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우선,확진 여부를 떠나 광주시와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며 생활 방역 준수 및 다수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 모이는 클럽 등 유흥 시설 방문 등을 자제토록 권고해왔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성접객원이 드나드는 유흥주 점과 동선이 겹쳐 진단 검사를 받게된 데 따른 의혹의 시선까지 견뎌내야 한다. 해 당 여성들은 당장 직업까지 알려지면서 심리적 압박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들 대상자들 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 한 만큼 선별진료소를 찾는 것 자체가 부 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선별진료소가 있는 자치단체에는 '개인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신분을 확인할 텐데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해주 느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전남도도 이같은 점을 들어 광주 상무 지구 유흥주점 등을 방문한 대상자를 대 상으로 오는 21일까지 도내 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단을 받도록 하고 익명성을 보장 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낮 폭염, 밤 열대야

광주·전남 폭염특보 21일까지 이어질 듯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 특보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 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7일 오전 11시를 기해 고흥·장흥·강진·해남·완도등전남 5개 군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를 경보로 격상 발령했다. 이로써 목포와 진도를 제외한 광주와전남 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지역에 따라 낮은 곳은 31.3도에서 높은 곳은 35.6도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오는 20일까지 낮 최고기온 31~33도 이르는 무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같은 기간 여순·순천·광양지역을 중심으로 상당수 지역에서 밤사이 최저기온 25도 이상의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겠다.

이와 함께 18일과 19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22~25, 낮최고기온이 31~35도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낮과 오후 시간대 활동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0일과 21일에는 전날에 비해 낮 최고기온이 1~2도가량 낮을 전망이지만 체감온도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5도 내외로 더욱 높겠다"면서 "건강 관리에 유의하고, 축산업과 산업 등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기자 mskim@

쌍꺼풀 수술한 원생 협박 아동보호시설 원장 벌금형

쌍꺼풀 수술을 한 보호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며 협박한 광주의 한 아동 보호 시설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 단독 윤봉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 의로 기소된 광주시 동구 A 아동복지시설 원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동구 아동복 지시설에서 자신의 허락 없이 쌍꺼풀 수 술을 하고 돌아온 10대 원생을 정신병원 에 입원시키려하는가 하면, 휴대전화를 빼앗고 반성문·서약서 등을 작성토록 하 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 에 넘겨졌다.

윤 판사는 "정신병원 입원 치료 방법이 치료의 목적보다는 아동들에 대한 통제나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점 등을 고려 하면 A씨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100억대 사기행각 여성 사채업자 구속

부안 해수욕장서 검거

지역 유력인사들에게 100억여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이고 6개월 넘게 경찰 수사 망을 피해 오다 최근 경찰에 붙잡힌 50대 여성 사채업자가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은 17일 투자금 수십 억원을 가로채고 부동산 개발 합작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횡령·사기 등) 등으로 50대 여성 사채업자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접수된 A씨를 상대로 한 고소 3 건을 기준으로 일단 피해 금액을 60억원 대로 추산하고 있다.

고소되지 않은 건까지 하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 만 현재까지 경찰에 추가 고소된 건은 없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A씨와 변호인은 범행에 대한

뚜렷한 진술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 해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1월 말께 고소장을 접수받은 이후 A씨와 통화, 출석을 요구했다가 응하겠다는 답변을 믿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2개월이 지난 뒤인 3월 말에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후 행적이 묘연하자 4월에 지명수배

와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었지만 경찰이 A 씨에 대한 단서를 잡지 못해 수사력과 수 사의지에 대한 의문까지 나오기도 했다.

경찰의 추적에도, 지난 13일 A씨는 전 북 부안의 해수욕장에서 일행들과 텐트를 치고 머물던 중 때 마침 인근 현장을 탐문 하던 경찰에 목격되면서 붙잡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부부싸움 뒤 홧김 불질러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 자형다

광주남부경찰은 17일 자신이 사는 아파 트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A모 (58)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 불로 안방에 있는 가재도구와 내부

(15㎡)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776 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인 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 시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자신의 안방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부싸 움을 한 뒤 아내가 집을 나가자 홧김에 담 배꽁초를 던져 불이 옮겨 붙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병호 기자 jusbh@

5·18 유공자 새로운 연금법 발의된다

오월 3단체, 매달 지급 방식 민주당안으로 국회 제출 요구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새로운 연금법 이 발의된다.

오월 3단체(5·18민주화운동 유족회·부 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5·18민주유공자 들에게 매달 연금 형태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 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3단체는 "기존 5·18 유공자들에게는 1980년 노태우 정권하에서 제정된 생활 지원금과 위로금을 1990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에 걸쳐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다"면서 "5·18희생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보상하는 것은 가해자였던 자신들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유공'의 측면을 배제하고 '희생'에 중점을 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0세의 5·18유공자 상이 1등 급자가 80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9860만원 상당인데 반해, 동일한수준인상이 2등급 4·19혁명부상자는연금과 수당으로 총 8억 1388만원 상당을받게 돼 9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5·18유공자 대다수가 60세 이상의 고령인상황에서 아무런 지원금도 없이 극심한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른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의 차원에서현격한 보상금의 차이를 연금·수당 등의방법으로 보전해줘야한다"고 설명했다

3단체는 다음 주에 이런 내용을 담은 개 정안을 민주당안으로 국회에 제출해줄 것 을 요구하고, 19일 광주를 방문하는 김종 인 미래통합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개 정안의 국회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정병호기자 jusbh@kwangju.co.kr



